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8616 |
|----------|------|

발의연월일 : 2021. 3. 8.

발 의 자 : 황운하·양정숙·김승원
민형배·최강욱·강민정
김희재·김영호·김홍걸
오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보다 당연퇴직사유를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임용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동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7헌가26).

이에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법률 제 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이 법 시행 후의 행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제10조의6(당연 퇴직) ----- ----- -----. |
| 1. <u>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u> 에 해당될 때 |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 <u>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u> ----- ----- |
| 2. 3. (생 략) | 2. 3. (현행과 같음) |